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충남의 대응방안

김용웅(안양대학교 교수/충남발전연구원 자문위원)

머리말

2003년말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이 탄력을 받게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은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공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핵심적 과제로 다루져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균형발전시책은 규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은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시책 추진과정의 결함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핵심적 국가발전전략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점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화체제 속에서 중국의 성장과 동북아경제권의 부상으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일대전기를 맞고 있다. 정보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한국성장의 동력이 되고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누적된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은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지역간 격차해소라는 공간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지역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추진체계의 정비이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정책은 대부분 규범적인 발전방향의 제시에 치중하고 구체적인 추진은 개별부처와 개별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틀 속에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가와 지역단위

추진조직 정비, 재정 확보 등 구체적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내생적 발전전략의 틀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생적 발전전략은 세가지 특성을 지닌다. 하나는 지역고유의 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지역발전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는 지역별 내부적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민-관-학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수단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지향하는 충청남도가 새로운 제도와 여건 하에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내용

1)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계획체계

국가균형발전법 제1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있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 하는데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배분과 시책추진에 있어 우선하여야 한다는 법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의지의 선언이라 볼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법 제2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수준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 할 계획내용, 수립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및 지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장기비전 계획체계에서 벗어나 실행위주의 5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방안,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역 과학진흥, 지역정보화, 지역문화, 관광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낙후지역 농산어촌,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서는 실천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대부분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중기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있다. 시·도는 지역혁신 목표, 지역발전역량분석, 지역혁신여건 개선, 지역혁신시책과 사업추진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집행토록 되어 있다. 시·군·구도 필요시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토록 하고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토록 되어있다.¹⁾

2)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

제3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가장 핵심적인 시책은 첫째, 지역의 경쟁력과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다. 지역혁신체제(RIS)는 지역내 혁신을 창출-확산-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협력 시스템과 환경을 의미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책은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 수평적 협력의 활성화, 지역혁신위한 인력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1) 국정홍보처 (2003) 대한민국 행복특별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²⁾

둘째,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시책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시책에는 지역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유치 촉진,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기업 간 협력, 제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기업과 지원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관계가 형성된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주요과제가 된다. 산업 클러스터는 연관산업을 집중시켜 기업간 정보, 기술협력 및 생산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하여 연관 기능을 상호 보완토록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핵심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의 불확성에 대응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정보 교류와 협력 및 집단적 학습을 촉진하여 신기술·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경영 등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방대학의 육성시책이다. 대학육성 시책은 지방대학의 산·학·연협력사업의 활성화,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장려 및 우수졸업인력 지방정착 지원, 인적자원개발시책 등이 포함된다. 지역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지역적 양성함으로서 지역혁신과 발전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일은 지방대학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

2) 지역혁신체계를 인위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논의단계에 불과하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ooke 등(2000)은 지역혁신정책의 지원분야를 ① R&D 기관이나 기업의 새로운 지식의 창출, ②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상업화 추진, ③ 기업, 조직, 개인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수용능력 증대, ④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확산 그리고 ⑤ 상대적으로 혁신성이 부족한 기업, 조직, 집단내의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 정립 등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은 ①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R&D 보조금 제공, ② 대학의 재정지원, ③ 연구 및 기술진흥조직 지원, ④ 산업별 기술센터 지원, ⑤ 산업과 연구관련 기관간 상호교류지원, ⑥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서비스제공 지원, ⑦ 클러스터정책, ⑧ 벤처자금 및 혁신금융에 대한 공공지원 제공 및 ⑨ 교육과 훈련 지원 등에 치중되어 있다.(Cooke, P. P. Boekholt and F. Todtling. 2000, The Governance of Innovation in Europe: Recent Initiatives and Experiences, Walter de Gruyter, 123-124)

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업종별 부문별 경제 및 산업단체, NGO, 지방언론 및 지역내 연구, 기업지원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 역량의 구축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³⁾

넷째, 이 밖의 주요시책으로는 지역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시책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는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진흥,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시책이 포함된다. 한편,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통합적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3장에서는 국가 및 지역단위간 통합적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조직 및 지원제도

국가균형발전법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의 추진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발전기획단의 설치·운영 및 지역단위의 시·도지역혁신협의회와 사무국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의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이다. 여기서는 국가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과 수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며,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지원을 위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해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그밖의 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도는 시·도혁신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기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시·도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에는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협의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시·군도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및 사무기구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규범적인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예산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점이었다. 제5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분의 80, 수도권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전입금,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원을 갖추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지역, 농산어촌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 지역문화예술, 관광자원개발,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활용되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전략산업육성,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과학기술진흥, 정보화, 공공기관이전, 기타 지역혁신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과제와 충남의 대응방안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특성 부각 및 추진로드맵 제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계획의 특성을 이해

하고 이에맞는 계획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은 전략적 부문에 한정된 5년단위 실행계획이다.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은 장기 지역발전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면, 지역혁신발전계획은 전략부문에 대한 시책과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전략부문의 실행계획은 계획목표의 설정에서부터 계획수립과 내용이 종합계획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종합적 지역발전계획의 목적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비해 전략적 실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 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적 실행계획에서는 제시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과 달리 시책과 사업의 실질적 집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개별시책과 사업별로 참여할 중앙 및 지방정부 부서, 공공 및 민간조직, 집단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같은 참여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전략적 실행계획으로서 기능수행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혁신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시된 시책과 사업별로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역할분담과 집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포함된 로드맵(road maps)을 제시하는 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2) 전략적 실행계획으로서 선별성과 우선순위 설정

전략적 실행계획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선도할 부문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략부문의 선별의 정도를 정하고 이의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와 시책간 상호연계를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충청남도는 성장하는 상대적 저발전지역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산업차원에서는 경쟁력이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자·정보기기, 문화산업,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석유정밀화학, 정밀기기 및 관광산업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17개의 세부산업부문의 다양한 육성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문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 및 인적자원의 범위내에서 계획기간중 이들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분야와 지원시책과 사업의 선별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및 시책간 연계성 강화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구체적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역발전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책조율과 협력, 파트너십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가발전목표와 지역발전목표를 일치시키고, 시책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처별 시책과 사업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행정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입장에서 국가시책 및 사업으로 추진될 내용을 선도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역의 자립적 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은 지방대학,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 매우 한정된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시책에 치중되어 있다. 이같은 전략적 실행계획이 지역발전목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업과 기존사업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지역단위에서 추진중인 투자유치, 창업,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산업 지원,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정부의 인프라 및 도시개발투자 사업과 10조원 이상의 농업 및 농촌부문투자 그리고 5-6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통합적인 추진을 위한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지향하는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와 이를 통한 전략사업과 관련사업간의 연계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4) 산-관-학 협력체제의 운영 내실화 촉진

지역혁신발전계획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조직과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기관, 조직, 집단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목표의 설정,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주도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와 참여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마련된 계획안의 추진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참여체제의 구축과 참여능력의 제고가 핵심과제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기업, 대학 등 민간부문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형 거버넌스는 제도적 조치만으로 구축·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차원의 협력체제의 구축은 실질적 운영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운영으로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⁴⁾ 효율적인 거버넌스체제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원화된 사회기능의 자율적 조정체제의 확립과 함께 지방행정조직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발전시책에 대한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관행과 문화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⁵⁾ 이는 단순히 필요성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합의의 도출을 계획수립 및 시책추진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의식적인 노력과 집중적인 자원의 투입이

4) 지역혁신·발전 거버넌스는 지역발전과 혁신에 관련된 지역조직 및 기구(regional organizations)와 이와 관련된 공급자집단과 수요자 집단간 연계, 협력 및 제휴체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체제(governance system)로 구성된다. 지역 거버넌스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과 연계, 정부조직 상호간의 연계, 협력, 분야별 지원조직 상호간 그리고 산-관-학 등 다양한 사회경제집단 및 개인간의 밀접한 교류와 연계, 협력 관계형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체의 구성 등 제도적인 차원 조치만으로 구축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5) 김용웅·차미숙·강현수(2003) 지역발전론, 한울 아카데미, 589-597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맺는 말

그동안 국토균형 및 지역발전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비전(vision)과 전략(strategy)을 제시하는 데 치중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발전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천(action)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등 모든 지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성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수립중인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이 실천가능성과 지역발전 촉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계획기간중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은 목표설정에서 실현가능성보다는 규범성과 종합성을 강조하여 비현실적으로 높은 정책목표와 정치적 스로건 형태의 지역발전목표를 제시하는데 치중했다. 그러나 지역혁신발전계획은 전략적 실행계획이므로 전략적이고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계획에서 제시하는 시책과 사업이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계획목표와 사업간 직접적인 연계를 강조하여 기존의 종합발전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시책추진의 선별성과 집중지원 강화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광범위한 시책과 사업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과 달리 전략적 실천계획에서는 자원의 한계와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시책과 사업을 최대한 선별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해야한다. 이해관계 집단의 자율적 참여 촉진을 위해 “지역혁신발전계획”안의 작성단계부터 중앙 관련부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지역내 대학, 기업, 민간부문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조직 및 집단들로 하여금 구체적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시책과 사업을 추진토

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개방적이고 자율적 참여와 협력체제의 구축은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이나 제도적 기반의 마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수평적 파트너십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관행과 문화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 민간조직과 집단이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의식 속에서 상호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이룰수 있는 학습지역의 면모를 보였으면 한다.